

라임운용, 환매중단... 판매사 몰래 돌려막아 피해 키워

부실펀드에 펀드별 최대 30% 투자
4월 만기 앞두고 환매 중단 가능성

신한은행 편입 자산 회수방안 검토
“라임이 임의대로 문제 펀드 재투자”
금감원, 불완전판매 등 새의혹 확인



라임자산운용(이하 라임)의 펀드 환매 중단 규모가 눈덩이 처럼 불어나고 있다. 당초 미국 펀드사기와 상관없이 정상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았던 펀드에서도 몰래 자금을 빼내 ‘돌려막기’를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펀드별로 다르지만 자산의 최소 7%에서 최대 30%까지 부실펀드에 투자했다.

문제는 숨겨진 부실 펀드들이 얼마나 더 나올지다. 판매사들은 정기적으로 운용보고를 받고 있었지만 라임이 펀드의 환매가 연기될 수 있다고 통보할 때까지 부실 자산에 투자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라임이 추가로 환매가 연기될 수 있다고 밝힌 펀드는 ‘크레디트인슈어런스(CI) 무역금융 펀드(이하 CI펀드)’다. 판매사는 신한은행과 경남은행 등이다. 판매규모는 신한은행이 2700억원, 경남은행이 100억원 안팎이다.

당초 라임이 환매를 중단한 펀드는 ‘플루토TF-1호’와 ‘테티스2호’, ‘플루토FID-1호’ 등 3개다.

CI펀드는 플루토TF-1호와 같이 무역금융펀드지만 정상 운용 상품으로 분류돼 왔다. 무역금융 채권에 투자하면서 신용보험까지 들어있어 위험등급도

3등급으로 낮았다. 연 3~4%의 수익을 안정적으로 낼 수 있는 구조라 중위험 중수의 상품으로 꼽히며 인기를 끌었던 상품이다.

오는 4월 만기를 앞두고 환매에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은 라임이 판매사들도 모르게 CI펀드의 정상 채권을 팔아 지난해 환매를 중단한 ‘플루토FID-1호’ 펀드에 다시 투자하면서다. ‘돌려막기’의 전형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들이 판매하는 모든 상품에 대해 실시간으로 운용상황을 확인할 수는 없다”며 “운용사로부터 분기나 매달 정기적으로 운용보고서를 받고 있지만 라임 처럼 의도적으로 속일 경우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부실 자산 편입 비중은 펀드별로 7~30%로 파악됐다. 일단 신한은행 측은 문제가 없는 자산은 만기에 정상적으로 고객에게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회수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금융권에서는 CI펀드와 같이 문제가 된 부실펀드에 투자한 상품이 추가로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라임의 사모펀드 판매잔액은 5조7000억원에 달한다.

라임에 대한 감독당국의 추가 검사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감원은 라임에 대해 펀드 수익률 돌려막기 등의 의혹이 제기되면서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검사를 진행한 바 있다. 검사 이후 1조5000억원 규모의 펀드 환매중단 사태가 불거졌고, 정상펀드의 ‘돌려막기’가 의혹이 아닌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존 검사에서 봤던 부분 외에 불완전판매나 다른 의혹 등이 제기되고 있어 필요하다면 추가로 더 검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라임 펀드에 대한 검사 결과를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어서 라임 자산운용에 대한 제재는 물론 판매사에 대한 책임부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신동빈의 공감·공생경영... 게임체인저 주문

(롯데그룹 회장)

롯데 새해 첫 사장단 회의

시장 급변 속 핵심 경쟁력 강화
유연한 기업문화 등 당부 전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동빈 회장과 롯데그룹 사장단들을 새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다. 올해 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핵심역량 강화와 사업구조 혁신을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롯데그룹은 15일 오후 2시 신동빈 회장 주재로 2020 상반기 롯데 VCM(Value Creation Meeting, 옛 사장단 회의)을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신 회장이 지난해 대법원판결로 ‘사법 리스크’를 해소한 이후 처음 열리는 회의로, 향후 경영과 관련해 어떤 비전을 제시할지 재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31층 강당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는 신동빈 회장을 비롯해 계열사 사장단과 BU·지주 임직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사장단들은 올해 경제 전망은 물론 지난해 그룹사 성과 리뷰와 중기 계획, 그룹 주요 이슈 및 전략 등을 공유한 것

특히 “핵심역량은 강화하면서 기존 사업구조를 효율적으로 혁신해 지속 가능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해 달라”며 “우리의 역량을 바탕으로 선제적으로 혁신하고 시장을 리드하는 게임 체인저가 되어 한다”고 당부한 바 있다.

이번 사장단 회의에서도 같은 맥락의 주문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이 급변하는 만큼 핵심 경쟁력 강화와 혁신이 필수기 때문이다.

이번 VCM에서는 유연한 기업문화 정착을 위한 롯데 직원들의 실천을 당부하는 목소리도 담긴 것으로 예상된다. 직원들 간 자유로운 소통과 의견 공유가 곧 기업의 경쟁력이라는 판단 아래 유연한 기업문화 조성에 공을 들이고 있는 신동빈 회장의 구상이 현실화 되려면 각 계열사 핵심 인력들의 실천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롯데 관계자는 “급변하는 시장을 리드하기 위한 게임체인저가 될 것을 강조하지 않겠냐”며 “사장단 회의에서 어떤 메시지가 나올 것인지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



지난 14일 인도 뉴델리 IFFCO 본사에서 열린 NH농협캐피탈과 IFFCO-키산 파이낸스(Kisan Finance) 간 투자서명식에서 김광수 NH농협금융지주 회장(오른쪽 두번째)과 아와스티 IFFCO 회장(왼쪽 두번째) 등 관계자들이 서명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농협금융

NH금융, 인도 농업금융 진출

지분투자로 여전사 2대 주주
서남아 지역까지 확대 계획

NH농협금융이 세계 최대 비료협동조합인 인도비료협동조합(IFFCO)과의 조인트벤처(JV) 방식으로 인도 금융 시장에 진출한다.

NH농협금융지주는 지난 14일 김광수 회장이 인도 뉴델리 IFFCO 본사를 방문해 농협금융과 IFFCO 양 그룹 산하의 여신전문금융자회사 간 투자서명식을 가졌다가 15일 밝혔다.

NH농협금융의 자회사인 NH농협캐피탈은 IFFCO 산하 트래터 금융 전문회사인 IFFCO-키산 파이낸스(Kisan Finance·이하 키산)의 지분 약 25%를 확보해 2대 주주로 올라선다. 한국계 금융회사 가운데 조인트벤처 방식으로 인도에 진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NH농협캐피탈은 이번 합작을 통해 약 3만6000여개의 농업 관련 협동조합을 회원사로 둔 세계 최대 비료협동조합인 IFFCO의 광범위한 영업채널과 안정적인 사업물량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인도는 세계 최대 트래터 시장으로 성장률이 연 8%에 달한다. NH농협캐피탈은 우선 키산의 현지 농기계 구매 및 담보대출 사업에 참여하고, 향후 사업영역 확대를 모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NH농협금융은 현재 설립 준비 중인 NH농협은행의 인도 현지 지점과의 계열사 간 시너지 사업 확대와 농업·금융 연계 비즈니스 등을 통해 인도를 넘어 서남아시아지역까지 글로벌 사업 영토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 회장은 “인도의 높은 경제성장률과 트래터 수요 확대에 따른 관련 시장의 견조한 성장 전망, IFFCO 등 경쟁력 있는 주주 네트워크를 고려했을 때 향후 키산의 미래는 밝다”며 “그룹 내에서 인도 금융업에 진출한 최초 사례로 기대와 관심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그는 또 “NH농협금융은 전략적 투자자로서 키산의 사업 확대와 성장을 위해 NH농협캐피탈의 임원선임·인력 파견 등 경영협력 뿐만 아니라 그룹 차원의 다각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NH농협금융은 농협만의 차별화된 글로벌 전략의 일환으로 현지 협동조합 또는 농업계 기업과의 협력·합작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이번 인도 IFFCO와의 금융 분야 합작을 통해 중국 공소그룹, 미안마투(HTOO)그룹과 더불어 아시아 3개 권역에서 안정적인 영업네트워크를 확보하게 됐다.

/안상미 기자

정부, 기본법제 마련 등 ‘AI 국가전략’ 고삐

>> 1면 ‘AI시대 역기능 막아라’서 계속

그 결과 나이, 성별, 결혼여부, 우편번호 등 15개의 인구통계학적 속성만 있으면 99.98%까지 개인을 식별할 수 있었다는 것.

정부는 가명정보를 조작해 재식별할 경우, 기업은 매출의 최대 3% 과징금, 개인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했지만, 예측하지 못한 변수로 가명정보가 식별화될 수 있다는 문제는 남는다.

지능정보산업협회 관계자는 “중국의 한 유튜브가 어느 지역에 사는 몇 살의 여성이라는 내용만 특정했는데도, 네티즌들은 누구인지 쉽게 찾아냈으며, 희귀 질환 영상정보는 개인을 특정하기가 더 쉽다”며 “데이터 3법 통과 전에도 데이터를 불법으로 사용하는 기업들이 많이 문제 제기돼 왔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없고, AI 산업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 3법 통과가 꼭 필요해 세부지침 마련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대

응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대통령 직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월 중 시행령, 규칙, 지침, 고시 등을 정비하고 향후 계획을 담은 마스터플랜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유관기관과 협력해 정보보호 기술 개발, 하위 시행령 등 신속히 후속조치를 내용을 계획이다. 정부는 또 ‘AI 국가전략’의 일환으로 올해 AI 기본법제 마련에 착수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AI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들에게 규제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지만, AI 시대의 원칙, 역기능 방지 대책 등 꼭 필요한 내용을 담은 법제를 내놓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채윤정 AI전문기자 echo@